

국민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국민권익

WINTER 2019 Vol.63

ACRC NEWS LETTER 2019. Vol.63

WINTER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민권익



국민 — 결



국민의 다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다리가 되어
더 나은 청렴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다리』



국민의 다리가 되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국민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CONTENTS

04

- 권익 포커스 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 08** **권익 포커스 ②**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15

- 15** **권익 르포**
국민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 16** **보다**
국민권익위원회 2년 6개월간의 발자취
- 18** **들다**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분석
- 22** **알리다**
2020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및 향후계획

24

- 40** **국민 생각함**
생활 속 불편, 우수 개선사례
- 42** **그곳을 걷다**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게 좋다
- 48** **권익 아카이브**
부패된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바꾸는 연극과 뮤지컬

12

- 12** **권익 빅데이터**
10월 민원동향분석

25

- 25**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 28** **권익, 지금**
제도개선총괄과
- 32** **청백리포터가 간다**
청탁금지법 3주년 행사에 가다
- 36** **청렴 TOON**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50

- 50** **권익 트렌드&이슈**
즐기기 위해 스트리밍 하라
- 52** **권익의식주**
생활이 텅 -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
- 54**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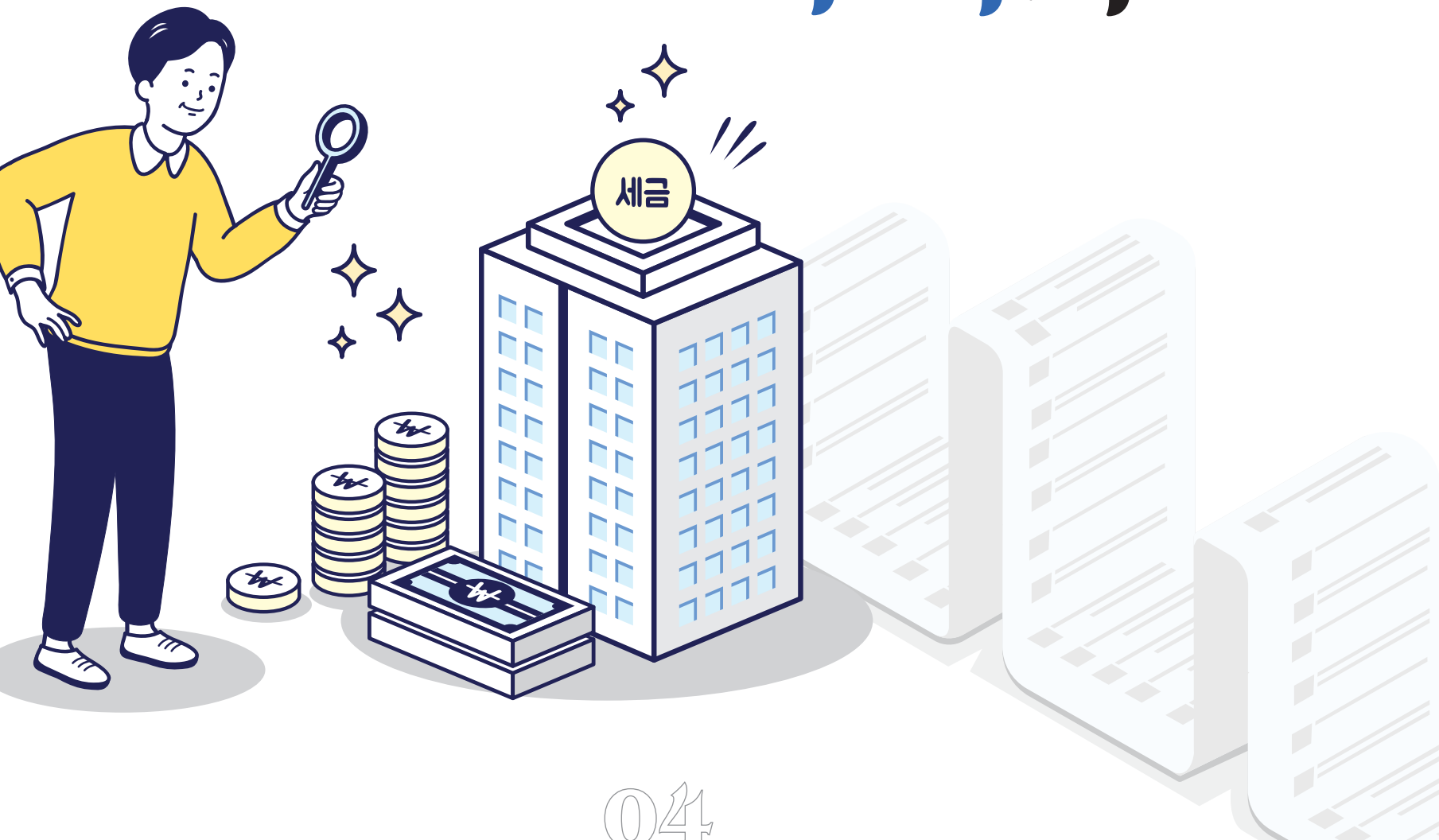
나랏돈은 눈먼 돈? 공공재정환수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유

[공공재정환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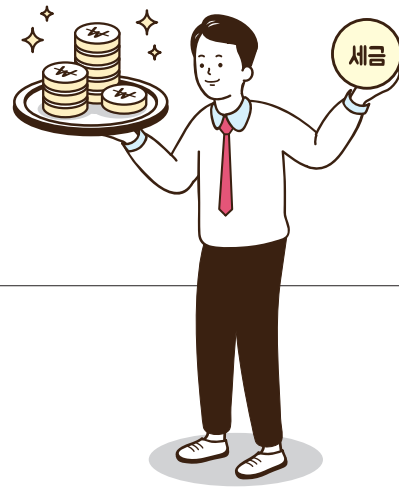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의 의미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보조금과 지원금 같은 공공재정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공공재정환수법’에 영향을 받는 예산은 무려 229조 원에 달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29조 원의 국민 세금을 지키는 법(法)이다.

우리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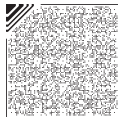


세금을 지켜줘

공공재정환수법, 왜 필요한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의미한다. 공공재정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동안은 부정청구가 발생해도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환수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각각 달라 재정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조금을 일단 받고 나면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단 21개 뿐이었다.('18. 4월 기준) 이 때문에 부정청구자에 대한 제재 없이 잘해봐야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 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이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재규정이 미비해 ‘걸려도 보조금만 토해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지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원활한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이고, 강력해진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과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환수한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부정이익 등 환수에 추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한다.

부정청구의 유형[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01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02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03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는 다르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04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례

종류	사례	적용 전	적용 후
유아교육 보조금	유아교육기관장 A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며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방과후 과정비 부정수급	부정 이익만 환수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 장학금	대학생 A의 부모 B는 회사에 근무하며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요양센터 대표 A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후 비용 부당 청구		
지방 보조금	지역 체육단체 회장 A는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를 구입, 거래 업체들과 사전 공모로 단가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부정수익에 대해 마땅한 제재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부정청구가 발생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고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부정청구 신고는 어디로?

누구든지 부정청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이메일 : clean1398@korea.kr
 FAX : 044-200-7972

신고 후 차별, 불이익당하면 권익위가 신고자를 보호

- + 신분보장 등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 신변보호조치
- 신고자들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위한 신고자 보상과 포상

- + 보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포상금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 곳에서 ————— 한 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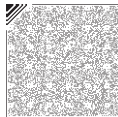
모든 정부민원, 간편·종합·심층 상담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해
종합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서울특별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 새롭게 찾아온 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거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앞서 민원센터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 업무 관련 일반상담의 경우 해당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0개 부처에서 조사관을 파견받아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부처 일반민원 상담을 하도록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 출범했다.



+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해 정부혁신 과제인 ‘간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이곳에 들어온 민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센터 상담관으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거쳐 정부부처 간 역할과 처리방향이 정해진다. 부처 간막이를 없애고 상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부처를 우선으로 상담관을 지원받고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 상담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 대안이 모색될 수 있게 됐다.

민원상담협의회 논의대상

- 민원해결을 위해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 민원해결을 위해 요구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안
- 민원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사안
- 민원에 대한 주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안

+ 전문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다 또 단순히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존보다 한 단계 향상된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연계된 영상상담시스템을 활용, 필요시 담당공무원·민원인·센터 상담관의 3자 영상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원센터에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88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137종의 민원서류도 접수·교부한다. 박은정 위원장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대정신이 원하는 소통의 확대와 부처 간 협업의 산물”이라며,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복합민원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존	추가
방문상담 전화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counseling.go.kr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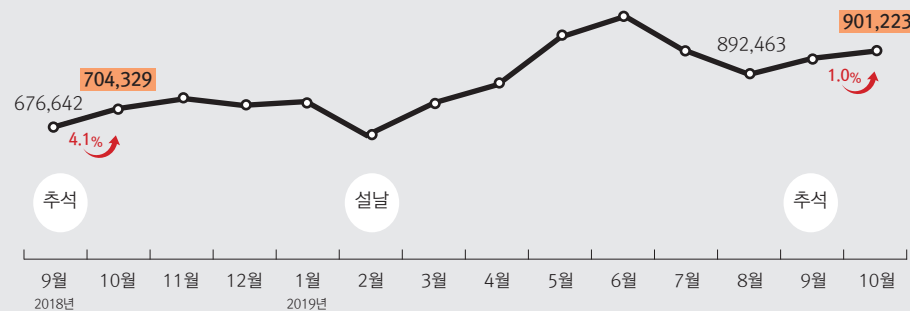


민원 추이

- + 10월 발생량은 총 901,223건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 + 전년도 동기(18년 10월) 증가율(4.1%)보다 3.1% 낮은 수준

2018년 월평균
591,872건

2019년 월평균
854,737건



신청인 현황

- + 연령별로는 30대(38.7%)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58.7%)이 많음
- + 신청지는 서울(36.2%), 경기(31.3%), 인천(7.5%), 부산(4.6%) 순



40대	33.6%
50대	14.4%
20대	7.6%



경기	31.3%
인천	7.5%
부산	4.6%



기관유형별 현황

- + 전월 대비 시도교육청(43.0%), 중앙행정기관(1.8%), 지방자치단체(1.3%)는 증가
- + 공공기관 등(4.9%)은 감소

중앙행정기관

10월	135,423
9월	133,066
8월	137,093

시도교육청

10월	18,965
9월	13,260
8월	13,317

지방자치단체

10월	606,234
9월	598,276
8월	620,683

공공기관 등

10월	140,601
9월	147,861
8월	105,498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 동향분석을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 ‘10월 민원동향분석’을 이곳에 담았다.

이슈분석: 공공임대주택

- + 17년 5월 ~ 19년 6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3,573건 분석
-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영향으로 19년 4월~6월 민원 급증
- + 40대(39.8%), 30대(35.1%) 신청인이 다수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유형

- + 공공임대주택 건설 찬반 : 33.7%(1,203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거나 이와 달리 건설 확대 및 입주를 희망하는 내용
- + 입주자 선정 기준 : 31.7%(1,132건)
신청·당첨·입주기준 문의 및 완화·개선 요구, 재계약·퇴거 완화·개선 요구 및 문의, 그 외 임차권 양도양수·명의변경 등에 관한 민원
- +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비용 : 15.6%(556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개선 요구 및 문의, 임대료·관리비 이의·문의,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 문의 등
- + 공공임대주택 시설 및 환경 관련 : 13.8%(492건)
결로, 누수 등 하자보수 요청, 주차장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등 각종 시설 설치 요구, 임대주택 건설현장 소음 등 불편해결, 임대주택 이름·주소 변경 요구 등
- + 부적격 거주자 신고 등 기타 : 5.3%(190건)
임차인 권한 문의, 부적격 거주자·당첨자 신고, 불법 양도양수 확인요청,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또는 사업자 간 매각 관련, 입주지연 해결요청 등

국민생각함 동향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제안·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나 공감에 많았던 안건 등 다양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0월 안건등록 현황	10월 등록안건은 605건으로 전월 대비 60.9% 감소(1,547건 → 605건) -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559건 → 605건) - 발제자 별로는 기관이 발제한 안건이 50.4%(305건) - 국민이 발제한 안건이 49.6%(300건)
----------------------	---

주요 국민발제 안건

1L 사이즈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처 공지 및 봉투 디자인 개선

발제자	홍OO '19. 10. 31. 발제
내용(문제점)	서울시 25개 구 모두 1L 사이즈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있으나, 1L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처를 알기 어렵고 쓰레기봉투가 이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되어있음.
개선방안	-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관할구역 내 1L 사이즈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처 및 잔여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지퍼식/손잡이가 달린 구조 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위쪽 묶는 부분의 길이를 늘이는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

여성안심귀갓길 개선에 대한 정책, 함께 해주세요!

발제자	김OO '19. 10. 26. 발제
내용(문제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 어플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 운송인력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개선방안	-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고 누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해 활용도 제고 - (여성안심스카우트) 운영시간대(월 22:00~00:00, 화~금 22:00~01:00) 조정 및 여성스카우트에 대한 처우 및 안전 관련 대책 마련 - (여성안심이어플) 어플 반응속도 등 기능개선 및 홍보 강화

권의 르포 ④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

국민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년 6개월간의 기록



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6개월간의 발자취

○

국민의 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권리를 살피며, 국민의 다리가 되는 것.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염원이 담긴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있다.



STEP
01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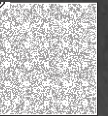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5대 과제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청렴하고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청렴·공정 사회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 + 반부패 개혁
-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 불공정·갑질 개선
- +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STEP
02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개혁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및 ‘청탁금지법’ 시행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부패방지 대책을 대통령과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5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청탁금지법』도 시행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19.8.)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탁, 접대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

79.5%

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는 응답

2018년 64.4% < 2019년 82.2%

응답대상: 공무원

STEP
03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해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2030세대 구직자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았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관으로부터, 감독기관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엄격히 보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각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는 신규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

채용비리, 해외출장 지원 등 특권·불공정 해소

2017년 ~ 2018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구제 99.4% 91.3% 재응시 기회 부여
8.1% 신규채용

감독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행 개선



부당지원 발생기관
관련 예산 전액
미집행·미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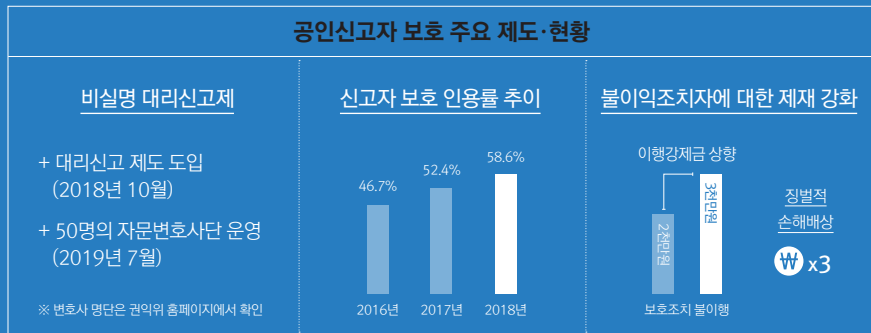


STEP
04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를 위한 제도 마련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혹시 모를 불안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국민들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변호사를 통한 상담·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다.



STEP
05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공정·갑질 행정 개선

국민신문고 분석 및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신문고 불공정·갑질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연간 4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분석해 법령과 제도 속에 숨어있는 편법, 특혜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학생보호인력 등 공공부문 채용 시 공직자를 우대하는 특혜성 조항이나, 공공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하는 관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불공정·갑질 관련 제도개선 사례
+ 특혜성 규정 정비 - 초중고 배움터지킴이 채용 시 특혜성 '공무원 우대조항' 삭제 + 불필요한 요구·갑질 개선 - 공공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해소

이동신문고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공직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따뜻한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통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기획 장벽, 소극행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고충을 해결하였다.

부당·불공정 행정으로 인한 고충해소 사례
+ 기획·진입 장벽 해소 - 국민 안전, 신규업체 시장 진입 저해 소방호흡기 독점 납품 특혜 개선 + 부당한 재산권 침해 해결 - 사유지에 설치된 무단 군사시설 철거·매입 및 사용료 지급

국제사회의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2020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한국을 개최지로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정·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김태웅 상임위원이 2018년 10월 2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폐막식에서 2020년 제19차 IACC 회의 한국 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공정·반부패 논의에 따른 성과

2017년 세계 51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부문 평가도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순위인 30위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하였다.

우리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부패인식지수(CPI) 대폭상승

2017년 세계 51 위 → 2018년 세계 45 위

2019년 국가경쟁력지수 ‘부패’ 부문 평가

2017년 세계 40 위 → 2019년 세계 30 위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

2017년 세계 24 위 → 2019년 세계 19 위

보다 가깝게 국민을 바라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사회 실현과 반부패 개혁을 주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더 투명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보다 가깝게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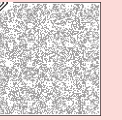
권한·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 적발, 사후관리 등 부패방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앞으로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일회용품의 판매 행위 등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산재한 불공정·갑질 발굴 및 정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거나, 각종 허가 시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국민 고통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ACRC NEWS

2019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제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 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계속 부양하면 계부모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에게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도록 202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1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10월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1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채용비리 신고로 공익 증진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정부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i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총괄과 044-200-7611



2020년 제9차 IACA 당사국 총회 서울 개최 의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와 병행, 반부패 경험과 해결방안 모색

10월 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내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IACA 이사로 당선된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IACA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IACA는 유엔(UN)총회 결의안에 따라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개관한 반부패 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세계 78개 당사국이 가입돼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및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국제교류담당관실 044-200-7151

레이안엘파인아파트 정문 앞 통학로 개설

현장조정회의로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조정안 합의

서울시 동대문구 레이안엘파인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월 1일 레이안엘파인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동대문구는 경관녹지에 2m 이상의 통학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동대문경찰서는 통학로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도시수자원민원과 044-200-7481



중앙선관위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 목소리, 정책 공약의 밑거름이 된다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공약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을 활용한 정책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공동 추진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정보 교류 등 국민의 뜻이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이슈를 제공하여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들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i 자세히 알아보기

민원정보분석과 044-200-7281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 전화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국민권익위는 2017년 국회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통신 요금을 무료로 할 것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10월 7일부터 국민콜 ☎110 전화를 무료로 전환했다. 국민권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 국민콜 ☎110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민콜 ☎110'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 이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i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콜 ☎110, 02-2110-6500



※ 위 소식들의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의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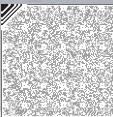
다양한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삶과 동떨어지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제도개선총괄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행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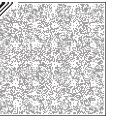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다

+ 제도개선총괄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크게 '부패 방지'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제도적인 한계나 문제점을 발견할 때가 있다. 실제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있다. 고충민원을 통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법령 혹은 제도를 개선하면 단순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했으나,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고 2010년에 권익제도기획관실이 설치되면서 제도개선총괄과에서 제도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제도개선총괄과에서는 단순히 제도개선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이행 관리까지 관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준 사무관, 추수진 서기관, 김희성 사무관, 정재일 과장, 이진희 주무관, 최명자 주무관, 윤희석 전문위원



+ 불합리한 제도, 바꾸면 됩니다

제도에는 관성이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도입한 제도를 현재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굳이 바꾸지 않는다.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기존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도개선총괄과는 이러한 제도개선 업무를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제도개선은 크게 ‘제도개선 추진 및 권고’, ‘제도개선 이행관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도개선총괄과의 업무 역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더라도 실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개선총괄과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부처가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후속 관리한다. 이날도 이행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출장 중이었다.

“기존 제도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제도개선총괄과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꾼 제도들이 처음에는 터가 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실제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하고 정리도 합니다.” 정재일 과장이 제도개선총괄과 업무와 그 중요성을 간략하게 전달한다. 제도개선총괄과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정재일 과장 외에 11명의 직원이 제도개선 업무와 이행 관리, 예산 및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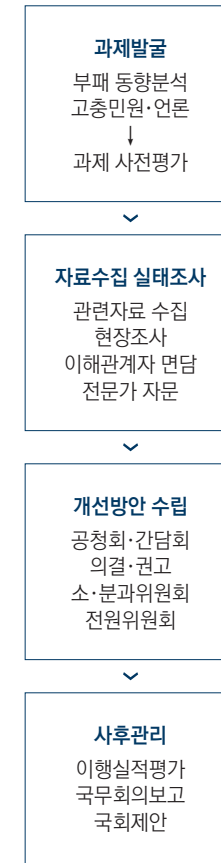
+ 우리 삶을 바꾸는 제도개선

특히 2019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두드러진 해였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기출문제의 정답을 공개해 연 2만 명에 달하는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를 강화했으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과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연 10억 원의 위약금의 감면 효과를 냈다. 2018년 4월 이후 이렇게 권고한 생활밀착형 과제만 129개에 달한다. 당연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과정이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근거를 찾아 기관에 제시하고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근거는 ‘국민의 의견’이다. 국민신문고나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문제 있는 제도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자문도 받아 민원 내용을 분석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잠복결핵 감염 여부 검진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좋은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예상한 결과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개선한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항상 느낀다.

제도개선총괄과는 2020년에도 사회 전반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제도들을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층 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제도개선을 이어가고자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힘이 되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에, 제도개선총괄과 역시 힘을 보탬 것이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제도개선 이행관리



feed-back

Mini Interview



김영준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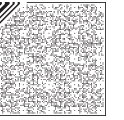
2019년 2월에 발령받아 제도개선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의 제도가 업무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수혜를 입은 분들이 보도 자료에 적힌 담당자 이름을 보고 부서로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제도개선의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성 사무관

2019년 7월에 제도개선총괄과에 왔습니다.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생각함’이라는 정치참여 플랫폼에 의견을 올리기도 하는데,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 주시고는 합니다.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가 아니더라도, 세밀한 제도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업무는 처음이라 앞으로도 적응을 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 차근차근 발전해가며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청탁금지법 3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을 주제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그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청탁금지법

3주년 행사에 가다

청백리포터
이진연 기자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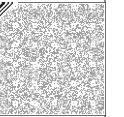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주로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니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식전 무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청렴을 주제로 ‘별주부전’을 각색해 부패한 공직자를 풍자하는 판소리 공연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잘 선택한 기획이었습니다.



청백리포터가 간다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우수 사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청탁금지제도 관련 시책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 우수한 사례로 뽑힌 두 기관의 시책 내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무수행사인 알림시스템'과 한국시설안전공단단의 '내부직원 공모'를 통한 청탁금지 제도개선 및 연극'이 소개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을 자연스레 높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허심탄회한
토크 콘서트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이자 마지막 순서였던 '토크 콘서트'는 총 6인의 패널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동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관, 최병철 박사, 추은호 YTN 기자, 이현지 경기도 충현초등학교 교사이자 래퍼,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패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생각, 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이나 관행, 문화에서 달라진 점,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토크 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은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청탁금지법'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판소리로 부정부패를 풍자하고, 실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청탁금지법과 부정부패에 관한 모든 걸 국민과 자유롭게 풀어냈습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많은 이들이 하나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청탁금지법을 더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3년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3,000명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7.1%의 국민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연수기 우수상 할 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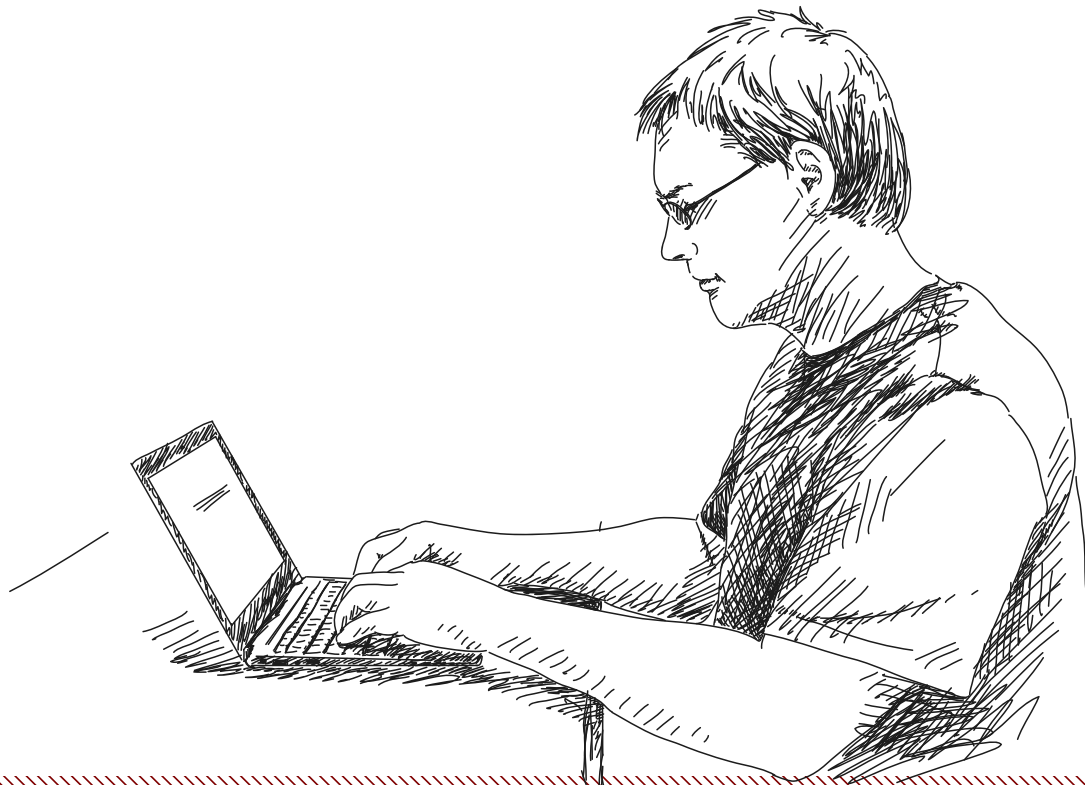
청렴을 지켰기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선함을 간직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힘든 시절이었다. 다행히 세상은 과거와 달리 희망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다. 청렴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어디에서나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옹은 목소리를 뚝뚝하게 낼 수 있는
사회는 그들의 작은 노력을 통해 오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나는 매우 평범하다.

나는 평범한 아들이었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버지다.

그리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다.



팀 회의도 공개가 아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뭔가가 구렸다. 공기가 사뭇 달랐다.
도무지 적응이 안 되었다.

나는 그리 용감하지 않고 나는 그리 정의롭지 않으며, 나는 그리 청
렴하지도 않다. 나는 매 순간 선택에서 흔들리고, 나는 가끔 불의를
보면 눈을 질끈 감고 넘기기도 한다. 이런 나는 겁쟁이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고발한다.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쉽게 끄집어낼 수 없는, 뭔
가 찜찜하고 금기어 같은 이야기를, 그 안에서 겁먹었던 나를 나는
말하려 한다.

그것은 내게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그럼에도 찢뜨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기억을 휘휘 저어 본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야 하며 투명해져야 한다.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나는 늦은 나이에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전산 특채에 임용이 되고 얼
마 지나지 않아 행정업무 정보통신담당자로 일을 하였다. 임용 전 프
로그래머로 7~8년간 일을 한 터라 소방공무원 정보통신 분야는 그
리 낯설지 않았다. 잘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바쁘고 기쁘게 일을 하
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루아
침에 정보통신팀이 해체가 되고, 나는 소방행정과 경리팀으로 흡수
되어 버렸다. 경리팀에서도 계속 정보통신 업무를 보며, 팀의 막내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과 서무 일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리팀은 정
보통신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업무 중에 많은 업체 관계자들
이 찾아오고, 각종 선물을 들고 오고,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해 달라
는 청탁도 많이 들어왔다. 팀 회의도 공개가 아닌 아무도 없는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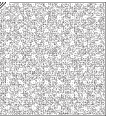
서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뭔가가 구렸다. 공기가 사뭇 달
랐다. 도무지 적응이 안 되었다. 나는 그리 곧고 정의로운 사람은 아
니었지만, 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했다.
그때 같은 팀원인 최 반장(소방교를 반장으로 부름)이 나를 불러 끝
나고 소주 한잔하자고 했다.

‘경리팀은 경리팀에서 해야 하는 일 말고도 남모르게 해야 하는 뒷일
들이 있다’고 했다. 어리둥절하고 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최 반장은 나보다는 세 살이 어렸지만, 소방서는 몇 년 먼저 들어온
선배였다. 각종 장비와 공사 계약 업무의 베테랑으로 경리팀에서 오
랫동안 근무한 엘리트 직원이었다. 우리는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 그
렇게 같이 근무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내며, 하루
피곤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며, 같이 웃고 같이 고민했다. 그럼에도
최 반장은 말 못 할 고민이 많았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았으며, 팀장,
과장은 그에게 중요 업무를 자주 시키는 것 같았다.

최 반장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일하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예산이니 하며 팀장님이 이상한
것을 주문하면 절대 못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꼭요. 꼭 명심하세요.”
최 반장은 ‘명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 반장의 우려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장 반장! 행정차 세차 좀 하러 가지.”

경리팀장이 갑자기, 같이 행정차(소방행정과 관용차량) 세차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최 반장은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팀장이 세차하는데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자동세차 안에 들어서자 팀장이 말했다.

“우리가 업무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들었나? 우리는 서장님을 모시는 팀이야. 곧 추석이 다가오고 비예산 들어갈 데가 많은데, 장 반장도 정보통신 공사를 계획하고 300만 원만 만들어 봐.” 그 비예산.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 후로 팀장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도 나를 멀리했다.

나는 모르는 척, 거절 아닌 거절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잠을 못 잤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연거푸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왜 그래요?”

“소방공무원 그만두고, 프로그래머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렵게 소방공무원이 됐다. 결혼하고 8년 뒤에. 아내는 기뻐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말에 또 한 번 말 없이 울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겠냐 싶어 아내는 눈물로 말을 대신했다. 아내의 울음 앞에서 나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다.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서장, 과장, 팀장.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 반장이 일종의 내 방패막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최 반장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는 ‘청렴, 근면, 진실, 성실’이라고 했다. 이런 글자를 보면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고 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세상을 너무 많이 보았다고 했다. 모든 세상사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이 가더라고 했다.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서장, 과장, 팀장.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 반장은 날마다 후회했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최 반장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최 반장의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나는 서 내에서 제대로 찍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힘들었지만, 팀장의 힘을 좇지 않았기에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까짓, 팬찮아! 버텨!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나는 날마다 주문을 외웠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 드디어 경리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나는 너무 기뻐지만, 내가 의지하던 최 반장도 팀장과 같은 소방서로 발령이 나버렸다.



비예산 300만 원 얘기는 입 밖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였다. 팀장의 영향력은 서 내에서 어마어마했다. 팀장에게 찍힌다는 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다. 역시나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최 반장이 다가왔다.

“비예산 얘기하죠?” 최 반장은 이미 다 알고 나에게 물었다.

“300만 원 만들라고 하시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최 반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버렸다.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심장에서 돌덩이를 꺼내는 것처럼 후련해졌다. 최 반장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꼴 나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참 솔직하고도 슬펐다. 나는 최 반장 덕분에 용기를 냈다. 두려웠지만, 팀장도 팀원도 짜증나게 나를 대했지만, 나는 ‘안 한다’고 매듭지었다. 나는 그 후로 최 반장에게 의지하고 위로도 받았다. 최 반장은 ‘많이 후회된다’며 ‘소방서장에게는 관사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그곳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관사 관리비는 예산으로 나오지 않고, 서장 차량 운행비용에서 하다못해 담배 심부름 비용까지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옛날에는 예방과에서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경리팀에서 맡아서’한다고 하였다.

‘수십 차례나 인사이동을 요구했지만 계속 잡혔고, 어느덧 그 일이 익숙해져 버렸지만, 괴롭다’고 최 반장은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곤 했다. 최 반장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고발, 사건, 사고 같았는데, 최 반장이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힘들어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들어주는 수밖에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다.

1년쯤 지났을 즈음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최 반장에게 전화가 왔다. 집 앞으로 갈 테니, 잠깐 나와 달라는. 주차장 앞에 나갔을 때 최 반장은 차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굉장히 험쵸해 보였다.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데, 최 반장이 갑자기 울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팀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고. 최 반장은 내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제 최 반장을 본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3일 뒤 최 반장은 세상을 등졌다. 최 반장이 죽고 난 후 소방서 본부 감찰과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 근무한 팀장, 서장은 해임을 당하고, 수십 명의 담당자들이 중징계와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나는 한동안, 지금까지도 힘들다. 왜 나는 그의 눈물 앞에서 들어주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최 반장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최 반장을 말리지 않았을까. 다 알면서 나는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고발하지 못했을까. 나는 겁쟁이였고, 나는 비겁했다. 나는 아직까지 그의 눈물을, 그의 잘못된 선택을, 그의 끝없는 고통과 후회를 기억한다. 나는 평범한 아이였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서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그래도 정의로운 편이고 도덕적인 편이다. 나는 보통의 편이고 상식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때는 침묵하고 묻어 두었던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여전히 편법이 있고 불공정한 사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는 두렵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은 건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한 우수 사례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국민을 위한 생각함

이달의 주제, <생활 속 불편, 우수 개선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찾아 ‘국민 생활밀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12개의 생활밀착 과제가 권고됐으며, 점차 개선이 완료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생활 속 불편이 개선된 우수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 ☎ 1600-8172

국민의 소리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불공정 사례들. 어떤 분야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할까?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과제 중 불편이 개선되었거나 인상적인 개선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총 참여인원 440명

☎ 2019-11-19까지

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보육(채용, 시험, 아이돌봄, 어린이집 등)	188명(42.6%)	관수
약자보호, 생활안전(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안전관리 등)	106명(24.0%)	
경제적 부담 완화(공공요금, 수수료 등)	72명(16.3%)	
알권리(행정정보 개별통지, 주요정보 공개)	21명(4.8%)	
행정서비스 이용편의(공급자중심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54명(12.2%)	

② 다음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로 개선된 사례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중복투표 3개까지 가능)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 좌석 변경	218명(49.5%)	관수
퇴직자도 직접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가능	80명(18.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정답 공개	45명(10.2%)	
합기도학원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하여 안전 강화	110명(25.0%)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	127명(28.9%)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 자매 포함	103명(23.4%)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전면 폐지	97명(22.0%)	
인천공항주차로, SRT, 자동차검사수수료에 대해 다자녀감면제도 도입	43명(9.8%)	
사업장 이전시 법인차량 주소(사용본거지) 변경등록도 안내, 고지	32명(7.3%)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발급	134명(30.5%)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에 국회의원, 교수 등이 아닌 직장 동료, 이웃도 가능	43명(9.8%)	
중등, 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91명(20.7%)	

WRITE 김지혜
PHOTO 최준근

진천으로 향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가을엔 단풍의 멋이,
겨울엔 설경의 장관이 눈을 즐겁게 했다.
생거진천(生居鎭川),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게 좋다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건 한동안 머물렀던 기억 덕분이었다.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게
좋다



천년을 품은 시간 위에

진천은 오래된 시간을 품은 곳이다. 아직 뜨거운 온기는 농다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가 있는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찬바람을 이기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굴티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놓인 다리는 존재만으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한다. 농다리는 경상도 상주읍지인 '상산지'(常山誌)에 “고려 초기 임 장군이 만든 돌다리”라고 전해지는데, 투박하면서도 강직해 보이는 장군의 면모가 남아있다. 그는 고려 고종 때 무신이었던 임연 장군으로 추정되며, 굴티마을은 성산 임 씨의 세거지로 알려졌다. 그의 생을 따지면 800여 년 된 다리다. 돌들이 대바구니(籠)처럼 얹히고설켜 불리는 '농다리'. 하나의 돌무더기를 자세히 보면 지네가 구불구불 강을 건너는 것 같다. 문헌에 따르면 총 길이 93.6m의 교각에 놓인 돌을 별자리 28수에 따라 28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4칸이 매몰되어 24칸이 남아있다.

다리를 건너자 걸음이 느려진다. 그제야 진천에서 흐르는 천년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초평호 수변 테크에서 하늘다리까지를 잇는 1km의 친환경 나무 테크로 꾸며진 초롱길로 걸음을 옮겼다. 걷는 내내 무성한 숲과 고요한 호수가 자리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낭만이 필요한 시간, 길 위로 걷기만 하면 된다. 낭만은 그대로 뒤따른다.

진천의 유명 3대 낚시터인 초평저수지, 덕산저수지, 백곡저수지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곳으로 낚시 포인트, 손맛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잉어, 붕어, 가물치, 뱀장어 등이 풍성하게 잡히는 호수는 고즈넉한 풍경이 낚시의 맛을 더한다. 저수지 근처에 붕어마을이 있는데, 이곳엔 붕어찜 맛집들이 전국의 붕어찜 애호가들을 반기고 있다.

붕어마을 뒤편으로 올라가면 환상적인 일몰 포인트가 자리한다. 붉은 해가 호수를 물들일 때쯤, 두타산 삼형제봉 한반도지형전망공원에 다다른다. 완만하게 오르는 길은 전체 1.2km로 천천히 걸어도 20여 분이면 전망공원에 닿을 수 있다. 해발 310m 지점. 그 중심에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눈앞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 북녘땅과 제주도까지 우리나라를 꼭 닮은 지형이 온전히 담긴다.

눈과 입, 손이 즐겁지만 한 가지가 아쉽다. 소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였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종소리를 진천에서 들었다. 여유를 벗 삼아 올려 퍼지는 종소리는 맑고 투명했다. 고대 유적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제철로를 소유했던 진천에 종박물관이 있는 것은 필연으로 다가온다. 전설 때문일까, 종에 얹힌 설화는 셀 수 없이 많다. 진천 종 박물관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에밀레종 이야기'(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 새끼들을 구해준 선비를 구하기 위해 머리로 종을 치다 죽은 '은혜 갠 까치 이야기'(치악산 상원사종) 등 설화를 비롯한 종의 역사를 전시하고 한국 종을 연구·수집·보존할 목적으로 개관한 국내 유일의 종 전문 박물관이다.

겨울의 심을 물들이고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진천종박물관
시간 10:00~20:00(매표시간 10:00~17:00)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입장료 일반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홈페이지 www.jincheonbell.net
문의 043-539-3847

●
진천은 역사와 더불어
사계가 건네는 웅장함과
초연함을 간직한 공간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진천에서 쓰였다. 진천 읍내에서 10분 거리의 충청북도 시도기념물 제1호 길상사는 사찰이 아닌 사당으로 신라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봉안된 곳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때 태령산 아래 김유신의 태가 묻혀 있으며, 그곳에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태실은 태령산 정상에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태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실 축조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중요한 유적이다. 당시 우물로 사용했다는 연보정과 김유신이 무술 연습과 말달리기를 했다고 전해오는 치마대도 있다. 진천을 방문한다면 김유신 장군의 탄생,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혼이 머물러 있는 곳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셈이다.

탄생지에서 떨어진 진천읍 벽암리 도당산 아래에 포근히 안긴 길상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특히 봄에 벚꽃이 피면 계단 중간 웅장하게 자리한 왕벚나무가 꽃을 피운다. 여름에는 청량한 초록내음이, 가을에는 은행나무 길이 운치를 더하고 겨울엔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김유신 장군의 무덤은 경주에 있지만 사당은 진천에 있는 이유는 진천이 김유신 장군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김유신이 태어난 생가 터는 진천읍 상계리 계양마을에 있다. 그 앞에는 화랑무예태권도성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화랑의 기상이 태권도로 계승되었다고 생각한 진천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열며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이곳을 지나 사자산으로 향하면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꿈을 품고 수행했다는 중악석굴과 그가 삼국통일을 기원하며 하늘에서 받은 검으로 두 동강 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단석,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의 불상인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을 볼 수 있다.

화랑처럼 피어오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
특히 연극과 뮤지컬은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이야기로 담아낸다.
그리고 생생한 전달력과 의미 깊은 대사로 이루어진 공연은 관객을 넘어 세상에 소리친다.
부조리한 일들에 눈을 감지 말라고.

세상에 날리는 뼈 있는 한마디



「고수를 찾아서」

장르 액션 활극
극단 동네풍경



TIP

사회 부조리를 화끈한 액션으로
연출하여 통쾌함과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오만한 후손들」

장르 연극
극단 산수유와 남산예술
센터 공동 제작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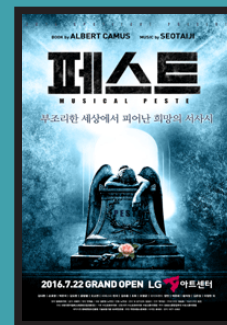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의 역사를 조명하며
공공극장의 가치판단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무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4대 고수들이 있었다. 4대 고수 중 최강자였던 송동숙은 지리산에서 무예 수련을 하다 밀렵꾼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고, 스무 살이 된 딸 금옥에게 세상에 나아가 고수들을 만나라는 유언을 남긴다. 세상에 나온 금옥은 어머니 동숙의 유언을 받들어 고수들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고수들은 자신의 정체를 지우고 악덕 기업주, 용역회사 사장, 비리를 일삼는 국회의원 등으로 숨어 지낸다. 자신이 갈고닦던 고명한 무예를 버리고 삶에 찌들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한 금옥은 고수들에게 비무장을 던진다.

1962년 4월 남산 중턱에서 동락의 햄릿이 막이 올랐다. '그리스 야외극장을 본뜬 원형 무대, 중세의 동시 무대에서 따온 객석 앞쪽의 에이프런, 근대극에서 발생한 무대 형식에서 가져온 메인 스테이지'를 가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의 개막이었다. 이 극장은 늘 시간이 어긋나 있다. 화려하게 그 막을 열었으나 운영은 고전을 거듭했고, 연극인들이 떠난 극장은 사유화되었다가 고작 근 10년을 공공의 극장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의 극장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극장은 1960년대의 시선이 쏠린 채로, 어긋난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다.

「페스트」

장르 한국 창작 뮤지컬
PD 송경옥
연출 노우성



TIP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회에 대응하는 사람들
당신이라면?

「스위니노트」

장르 스릴러 뮤지컬
PD 신춘수
연출 에릭 셰퍼



TIP

사회의 묵인 속에서 당한
잔인한 사건, 억울한 누명.
그가 휘두른 날 끝에 있는 것은?

2096년 오랑시티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욕구 등 감정과 기억을 통제한다. 어느 날 원인불명의 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의사 리유는 이 병이 '페스트'임을 감지해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나 오랑시의 시장 리샤르는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이를 거부한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치유하는 자'라는 유명 식물학자 타루는 리유를 도와 시민봉사대를 조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시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시장 리샤르는 오랑시티를 폐쇄하기에 이른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런던. 영국의 귀족 문화는 정점에 달하고, 상인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더욱 부유해졌으며, 권력층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 젊고 재능 있는 이발사 벤자민 바커는 아내인 루시, 그리고 어린 딸 조안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를 탐한 터핀 판사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멀리 추방을 당하게 된다. 15년 후, 벤자민 바커는 스위니 토드로 이름을 바꾸고 젊은 선원인 안소니의 도움을 받아 런던으로 돌아와 복수를 계획한다.

즐기기 위해 스트리밍 하라

2019년 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수했다.
워라벨, 뉴트로, 밀레니얼 세대 등 라이프스타일에서
나아가 소비트렌드까지 영향을 끼친 키워드들은
2020년에도 영향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던
스트리밍 라이프를 소개한다.

※ 스트리밍 :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



음원 스트리밍 과거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카세트테이프와 CD를 구매하거나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MP3에 저장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활발히 사용하는 추세이다. 한 곡당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던 시대는 지나고, 매달 정기 이용권을 구매해 무한정 스트리밍하는 시대가 되었다. 음원을 소비하는 과정이 함축적이게 변하고, 음악 감상 방법도 간편해졌다.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영상 스트리밍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뀌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대세였다면, 이전 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튜브가 대세다.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속 스트리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외식 산업 트렌드를 바꿀 정도이니, 그 영향력은 어마하다고 짐작된다. 더구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가 되었다는 것도 영상 스트리밍이 대세라는 걸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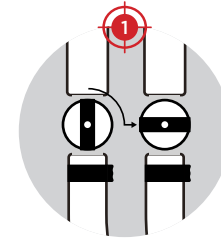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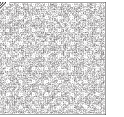
장난감 도서관 스트리밍이 문화생활에만 적용된다는 건 큰 착각이다. 세월이 무섭게 금방 자라는 아이들의 장난감은 개월 수와 나이에 따라 의미도 쓰임새도 천차만별이다. 그때마다 구매하자니, 먼 훗날 안 쓰는 장난감들을 처리할 방법에 곤란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럴 땐 ‘대여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필요할 때마다 빌리고 반납한다면, 처치 곤란으로 울상을 지을 일도, 장난감 욕심에 울부짖는 아이를 혼낼 일도 줄어든다. 요즘은 가구와 자동차도 손쉽게 빌릴 수 있다니, 관심 가는 분야의 스트리밍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현재 소비자는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구매하고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문화생활 이용 지표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구독 개수로 판가름이 날 정도이니, 2020년의 스트리밍 콘텐츠는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차디찬 칼바람이 부는 겨울.
전국적으로 설치된 난방비 폭탄으로
집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난방비 폭탄.
지갑을 사수하기 위한 난방비 폭탄의
제거 기술을 소개한다.

난방비 폭탄을 제거하라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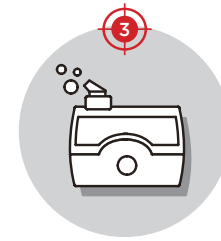
사용하지 않는 방의
보일러 밸브를 잠가라

쓰지 않는 공간의 문을 닫고 보일러 배관실에 가서 그 방에 해당하는 밸브를 잠가두자. 보일러가 가열하는 난방수 유량과 면적이 줄면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분배기의 방 밸브는 최소 2개 이상 열어두어야 하며, 강추위가 예상될 때는 동파예방을 위해 각 방의 밸브를 모두 열어 바닥에 난방수를 순환시켜야 한다.



난방 하지 않을 때는
외출모드로 설정하라

장기간 외출 등으로 난방을 잠시 하지 않을 때에는 보일러를 끄는 것보다 외출 모드로 해두면 난방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한 겨울에는 보일러를 처음 가동하면 바닥의 난방수를 데우기 위해 몇 시간씩 가열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보일러
점검으로 효율적인
난방을 가동하라

정기적인 보일러 점검은 보일러의 수명을 늘리고,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2~3년마다 한 번씩 난방수만 교체해도 보일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매년 본격적인 난방 전에 배관과 필터 청소를 해주고, 여유가 된다면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하자.



‘에어캡(뽁뽁이)’를 통해
차가운 외부 공기를
차단하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의 지갑을 사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에어캡, 뽁뽁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한 이 아이템은 문과 벽을 통해 들어오는 추운 바람을 외부에서 한 번 더 막아준다. 유리창에는 물만으로 간단히 붙을 수 있고, 벽에는 접착용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키면 된다.



하루 2번 환기하고,
실내 온도는
18~21℃를 유지하라

지시에 따라 모든 월동준비를 마쳤다면, 난방비 폭탄 걱정 없이 겨울을 나면 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켜 공기를 갈아주고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실내 온도는 18~21℃가 적절하다. 그 이상은 난방비를 15% 이상 상승시키며, 실내 외 온도 차로 인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독자의
소리

지난 <가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정진호(제주도 서귀포시)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내용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내용이 저도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점들이어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사실도 조금은 놀랐습니다.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정상호(충남 부여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국민의 용기있는 부패·공익 신고로 사회악이 근절되고 대한민국 곳곳에 부패의 고리가 끊어진다면 저 또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미연(서울시 중랑구)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새로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당차고 밝은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정책홍보를 영상으로, 인터뷰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겠다는 구체적인 각오들이 기대감을 주네요.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자주 만나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왕재이(전남 여수시)

<그곳을 걷다> 코너에서 소개한 '고흥 소록도'를 읽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가장 정성을 들여 우선치료를 해야할 한센병환자들이 세상 가장 낮은 대우를 받으며 반세기 이상을 사셨네요. 한센병 환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소록도를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정제인(경기 고양시)

<아버지와 생크림 케이크>를 읽으며 저도 어릴적 똑같은 경험을 했기에 100%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어릴적 아버지의 청렴이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큰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원회는 권한·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 ○○○○○○○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힌트 : 권익르포 24p)

지난호 정답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정답자

최진(충북 제천시)

황선갑(대구 수성구)

강현숙(경기 시흥시)

박혜정(경기 용인시)

이춘임(경기 포천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허위청구

×5

과다청구

×3

목적 외 사용

×2

공공재정환수법 2020.1.1.시행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